

코스피 3186.01 (-10.31)	코스닥 796.91 (-1.52)
금리 (연평균 9년) 2.426 (+0.010)	환율 (환/달러) 1389.80 (+2.20)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가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을 앞세운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AI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디지털전환(DX)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대 전환기를 맞아 '생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전환기의 핵심동력인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韓, 성장률 2% 버거워 미래 성장동력 키우고 '규제혁신' 효율성 절실

뉴메트로 10년 기획

전환기의 대한민국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작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 도달조차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다. 저성장의 주요 원인 가운데 신성장동력의 부재가 거론된다. 남녀 간, 중산층·서민과 부유층 간 소득격차 및 갈등을 비롯한 사회 분열은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폐해로 뿌리내렸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인구, 산업, 사회 등 주요 분야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다. 이를 당장 해소하기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관련기사 3면>

'신성장동력 부재' 저성장이 원인
국내 인구 유소년 비중 10.5% 불과
수출 美 의존 줄이고 다변화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조조정 통해 성장률 하락 막아야"

불리한 요소들에 막혀 꺾이느냐, 역경을 극복하고 재도약 하느냐의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대책에 따른 점진적 해소를 통해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집계 따르면 국내 0~14세 인구 비중은 올해 7월 말 기준 10.5%로 역대 최소 규모다. 거주민 10명당 유소년이 1명 남짓이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인 2015년 7월(13.9%)과 비교해 3.4% 포인트(p)나 줄었다.

한국은 이미 3년 전부터 OECD에서 관련 비중이 가장 낮다. 지난 2022년 기준 11.5%로 내려앉으며 일본(11.6%)에도 밀려 '아이들이 가장 적은 회원국'이 됐다. OECD가 그 이후의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행안부 수치만 봐도 최근까지 3년간

1%p나 더 줄어든 사실이 확인된다. OECD가 함께 제시한 52개국(비회원국 포함) 수치를 보면 전 세계에서 아이들 비중이 가장 작은 곳은 한국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불투명·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더해 미국발 상호관세라는 직격탄까지 맞았다. '우방'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끄는 국내 산업에 미칠 여파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차전지와 가전제품, IT(정보통신) 제품 등도 수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수출 시 타국에 비해 대미 의존도가 높다. 이에 수출대상지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상호관세 부과 이후 더욱 커졌다. 동남아와 중동, 남미, 중앙아시아 등이 대체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특정 국가 교역 규모·비중의 변동은 상대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보고서에서 "AI(인공지능)·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규제 혁신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 갈등이 곳곳에 존재한다. 서울과 그 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값 차이는 불과 10년 전에 비해 엄청난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방 아파트엔 신축에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OECD에서 수십년째 가장 크다. 갈등은 비단 소득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게임·탄핵을 거치며, 정치 성향에 따른 사회 반목이 도처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전공의 오늘부터 현장복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상당수가 9월 1일부터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31일 서울 시내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3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등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들은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에 대한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합격자를 통보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 정원을 인정하고, 군 미필의 경우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경우 70~80%가 복귀할 전망이다. /뉴시스

조선·원전 한미협력 강화... '뉴삼성' 탄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귀국
젠슨황 등 고객사와 AI 사업 논의
삼성중·물산 등도 美 기업과 협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등의 미국 활동을 마치고 약 일주일 만인 31일 귀국했다.

출장 기간 이 회장은 조선과 원전 사업 등에서 한미 협력 강화에 힘을 싣는 한편 엔비디아 등 핵심 고객사와 인공지능(AI) 사업 협력을 다졌다. 이 회장은 10년 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털어내고 위기에 처한 삼성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법 모색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이 회장은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의 자국산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 "일 열심히 해야죠"라고만 답했다. 또 이번 출장 기간 중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의 만남과 내년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일 열심히 할게요"라고 답했다.

美, 삼성·SK 中 공장 장비공급 제한... 생산위축 우려

반도체 장비 공급 건별 허가 받아야
절차 시간소요 등 장비공급 지연 우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간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장 내 장비 반입 과정에서 허가 절차가 지연될 시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미



이 회장은 지난 7월 29일 미국으로 떠나 8월 15일 귀국하는 등, 8월 한 달 동안 20일 넘게 미국에 머무르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교류하고 사업을 구상했다. 8월 15일 귀국 당시, 출장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내년도 사업 준비하고 왔습니다"라고 짧게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출장에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동행해 조선과 원전 분야에서 한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한 핵심 고객사들과 만나 인공지능(AI) 등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해외 출장마다 새로운 비전을 완성해온 만큼 이번 출장 기간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선보였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저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

)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에너지 개발사 페르미 아메리카와 미 텍사스주의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에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 회장이 젠슨 황 CEO와 포옹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7월 대법원 무죄 판결로 사법 족쇄에서 벗어난 후 경영 보복을 넓히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미국 출장기간 중에는 애플과의 반가운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애플은 지난 8월 6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칩을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업계는 이 제품이 이미지센서(CIS)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8일에는 미국 완성차 업체 테슬라와 23조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칩 위탁 공급 계약도 맺었다.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 대통령실 "이배용, 휴가라고 국회 출석·답변 의무 면제 안 돼" /사진 뉴시스
▲ 조국혁신당 "정기국회서 내란 청산·검찰·정치 개혁 강력 추진"

▲ 국회 "민노총·전교조 내세운 李 '한쪽만 쓰면 위험'은 허언...최고진 사퇴하라"
▲ 민주당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특혜 의혹"...서울시 "위법 사항 없다"

▲ 산재예방에 '4.5일제' 지원...내년 고용부 예산 37조 '역대 최대'
▲ 與 특검 특위 "특검법 개정 신속 추진...내란특 별재판부는 당 지도부 검토"